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내년 국가예산 확보 선제 활동 개시

전북자치도, 시군 등과 협업  
주요 신규사업 562건 발굴  
지역 지속성장 발전 동력  
정치권 등과 예산정책 협의  
탄탄한 공조 체계 유지키로



27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3차 발굴 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실무자들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활동을 갖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562건(2025년 국비 요구액 7,243억원 상당)을 발굴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활동을 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국가예산 신규사업 3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발 앞선 선제 대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추진단과 전북연구원, 14개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해 왔다.

신규사업은 안정적 재원확보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계속적 사업확장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3월 현재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562건을 발굴했으며, 이번에 발굴한 주요 신규사업들은 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사회간접자본(SOC), 환경·안전·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정확충은 물론 지역 지속성장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대규모 국책 사업 종료 등 국가예산 확보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역대 최대규모 국가 예산 신규사업으로 562건을 발굴했으며, 이번에 발굴한 주요 신규사업들은 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사회간접자본(SOC), 환경·안전·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정확충은 물론 지역 지속성장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발굴된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100대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해,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사전 설명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주요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점 확보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치권·시군과 탄탄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부처 단계부터 최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고 구체적 논리와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 의지 확고

김중훈 경제부지사, 진안 소재 젓갈 제조업체 방문  
삼성 현지 멘토 컨설팅 통해 생산성 46% 등 개선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계획서 내달 3일까지 접수



27일 진안 관내 젓갈 제조업체를 방문한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연초 김관영 지사의 첫 현장 행정에 이어,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방문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휘부에서 직접 챙기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전북자치도는 27일 김중훈 경제부지사가 진안 관내 젓갈 제조업체를 방문해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성과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젓갈업체처럼 삼성전자의 컨설팅을 보다 도내 많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게 전북자치도 자체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전북자치도가 힘을 합쳤다는 소식이 지난 2월 사전조사에 200개 기업이 참여의향을 밝혔다. 당초 목표 70개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연간 구축목표 70개 중 기초 단계에 가장 많은 40개를 배정했다. 이는 정부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전략'에 따라,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ICT 전환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부분별 표준화 및 자동화 공정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자체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체질 개선한 도내 기업은 정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제조공정의 자동화 역량을 보다 강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오는 4월 3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의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도내 제조혁신의 새로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것"이라며, "전북형 젓갈 멘토들이 불합리한 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전북형 프로젝트에 많은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오늘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전북선관위 "유권자,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 소품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먼저,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장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출력 없이 화면만 표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당·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적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 전북자치도, 복지부 지역 책임의료기관 공모 선정

전주·익산·정읍 등 3개 권역

전북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전주권 전주 예수병원, 익산권 원광대학교병원, 정읍권 정읍아산병원 등 총 3곳이다.

도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전북대학교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 군산권 군산의료원, 남원권 남원의료원이 지정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모든 진료권의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 있어 고난도 필수요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을 하며,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요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에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공공의료본부 설치 및 원내·외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의료 등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김재훈 기자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